

# 한·일 과거청산의 '열쇠찾기' 작업 활발

광복 50돌 맞아 출간 잇따라... 일본 등 외국 저자의 저술이 대부분

한·일 과거청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강제연행(징용, 징병, 위안부)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들의 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광복 50돌을 맞이해 속속 출간되고 있는 이 책들은 강제연행 문제의 해결이 비단 피해자나 그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는 일본민족의 공통적인 과제라는 데 주장을 같이한다.

최근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본군 위안부(통칭되던 중군위안부는 자발성이 인정되는 용어라 하여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들의 증언이나 수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참상과 전쟁 후의 삶을 밝힌 책들.

정학수, 정계화, 모리야마 스스꼬, 이천영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야 했던 정학수 할머니의 구술을 정리한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었다》(깊은사랑)는 일본군 군용품의 일부로 취급당하며 죽지 못해 살았던 일본군 위안부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열네살에 일본군에게 납치당해 견디기 힘든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생활하다 도망쳐 국민당부대로 들어갔던 정학수 할머니는 전투가 일어나 공산당 부대의 포로가 된다. 전쟁이 끝난 후 결혼한 그는 아이를 못낳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모든 꿈이 깨진 채로 중국의 한 벽촌에서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왔다. 이 책은 할머니의 힘겨운 삶의 행로를 남경대 박사과정생 박선영씨와 중국 강소성 서주시 인민은행 증권부 사장인 류 바오 춘씨가 함께 엮었다.

## 일본군 위안부들의 처참한 삶의 기록

강제연행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비롯됐다. 이른 시기인 70년대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일본인 야마다 메이코씨의 《중군 위안부들의 태평양전쟁》(쑥맥)은 일본인이 일본인 스스로를 고발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전쟁중에 해군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의 체험과 중군기자들의 증언과 기사, 태평양전쟁에 참가했던 장교들이 남긴 기록, 현지인들의 증언, 미국측의 심문자료 등 사실적인 근거를 토대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화약의 원료가 되는 초석과 바꾸기 위해서 일본의 여성들을 유럽으로 팔아넘겼으며, 일명 '남자군'으로 불린

## 강제 징용·징병·일본군 위안부 등

### '강제연행' 문제는

한·일 과거청산의 핵심적 요소다.

### 이 문제를 다룬 최근의 책들은

#### 강제연행의 문제가 오늘까지

#### 이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며

#### 제국주의 횡포에 대한

#### 엄단이라는 의미에서

#### 세계적이고 범인류적 문제라는

####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일본의 세계제패의 꿈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일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전쟁 때는 조선인, 중국인 등 각 식민지의 여자들을 강제로 혹은 감언이설로 속여 위안부로 삼았고, 전후에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감추고 속이려고만 들고 있다. 저자는 이제는 치욕을 몸소 당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술가 조지 힉스가 쓴 《위안부》(창작과비평사)는 영어로 씌어진 최초의 위안부 관련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군의 위안부제도도 개별적인 악행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군·관의 체계를 총동원하여 식민지 여성들을 유인하여 자행한 공식적, 체계적 강간이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한국인 중에서도 일본의 위안부 모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가 많았음을 아프게 꼬집는 한편, 연합군측이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일본 점령 후에도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한 것을 비판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전세계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한다.

한일문제연구원(회장 서남현)이 펴낸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아세아문화사)은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끌려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들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시신조차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채 50년 세월이 흘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정신대 문제,



한·일 과거청산의 핵심 사안인 강제연행 문제를 다룬 책들.

수만명의 원폭 피해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본 사회의 냉대와 법적 차별 속에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강제동원 1세대와 그 후손인 70만 재일 한국인들의 현실, 아울러 사할린 잔류 한국인들 역시 청산되지 않은 한일 관계상 중의 하나이며, 일본 전역의 강제동원 현장에서 무덤도 갖지 못한 채 백골로 방치된 45만 한민족 희생자의 유골 또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반증하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식민지배의 청산을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실태조사, 유골수습과 진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 전쟁 책임자의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

## 올바른 관심 유도할 연구서 절실

《한일 50년은 청산되었는가》는 연합통신 도쿄 특파원인 김용수씨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장 취재와 증언 청취, 관련자료와 연구서들을 뒤지며 강제연행의 실상과 그 해결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일본의 강제연행의 만행을 규탄하고 고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 밝히고 있다.

종래 나온 이 분야 책들이 대체로 회고록이나 고발 수기,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치중한 소설 등에 머무르고 있었던 데 비해 최근에 나온 책들은 강제연행의 문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며, 제국주의적 횡포에 대한 엄단이라는 의미에서 세계적이고 범인류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조

사와 연구를 이루르고 있다는 데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 책들이 일본인이나 외국의 저자들에 의해 씌어진 것이 태반이고 본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서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91년에 설립, 정신대 문제를 표면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정례적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계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정신대 대책협의회의 윤정옥 회장(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은 국내에서 이 분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90년대부터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부의 성격에서 우선 찾는다.

“광복 이후 바로 분단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혼란과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어긋난 역사가 강제 연행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로 일본의 경제적 지원 받기에 급급했던 3공화국 시절에는 일본의 비위를 거슬리는 논의는 알아서 자제해야 했던 시기였고 이러한 상황은 군사정부 시절 줄곧 유지되었다”는 것.

아울러 일본정부의 자료 공개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그 연구와 조사작업이 앞서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늦어진 데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윤회장은 “강제연행을 일과성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일부이며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는 학계의 연구작업이 활발해져 그 성과를 대중들과 공유,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정 기자